권역별 경선 첫 관문 호남서 문재인 대세론 판가름 난다

조기 대선 이슈&분석
민주 경선과 호남 표심

과반 이상 확보 못하면 결선투표 변수 이변 일어날 수도

이재명·안희정 2위 싸움도 관심…조직 동원 투표 우려

'탄핵·특검' 정국으로 19대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인 대선 일정은 안갯속이지만 대권을 향한 주자들의 발걸음도 덩달아 빨라지고 있다. 사실상 스타트 총성이 울린 대선 정국의 이슈를 점검하고 의미를 분석해 본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 룰을 확정하고 지난 31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돌입했다. 경선 방법은 완전국민경선제다. 완전국민경선제는 참여를 원하는 일반 국민은 누구나 선거인단에 들어올 수 있고, 이들의 투표권은 기존 대의원이나 권리당원의 투표와 동등하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은 지지자들을 선거인단에 참여시키느냐가 관건이다.

◇권역별 경선 첫 관문=민주당은 대선 후보 경선을 호남·영남·충청, 수도권+강원+제주 등 4개 권역에서 실시한다. 당초 전국 8~9개 지역에서 실시하려 했으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정 시기의 유동성과 시간이 충분치 한다는 점에서 권역별 경선으로 대폭 제한했다.

권역별 경선은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통해 실시된다. 선거인단은 이르면 이달 중반부터 콜 센터와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현장 투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하되 일반 시민도 신청하면 가능하다. 권역별 투표 결과는 당일 현장에서 발표된다.

권역별 경선의 첫 관문이 호남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호남이 야권의 심장이라는 점에서 호남 민심의 향배는 전체 경선의 흐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호남 권역의 경선 시기는 헌재 탄핵 결정 시기와 연동된다. 2월말 인용 결정이 나면 3월 초순에, 3월 초순에 결정이 이뤄진다면 3월 중순에 경선이 치러진다. 특히, 호남 경선을 앞두고 각 후보가 어떠한 호남 발전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다. 일각에서는 호남의 미래 경제 생태계 조성에 대한 구체적 방법과 함께 야권 공동 정부론으로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문재인 대세론은=일단 호남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 조직이 가장 크다. 지지율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 호남 지역 경선에서 문 전 대표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대부분의 호남 지역위원장들도 문재인 전 대표 지지 성향을 보이고 있다. 대세론에 편승한 분위기도 있지만 정치적 현실이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느냐가 관건"이라며 "호남에서의 과반 이상의 지지를 실현시켜 문재인 바람을 공고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 전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도 여전하다는 점에서 이변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안희정,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는 호남 민심의 흐름도 만만치 않다. 문 전 대표가 압도적으로 승리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시선도 있다.

일각에서는 문 전 대표가 과반을 넘지 못하고 2·3위 후보의 지지율 합계가 50%를 넘을 경우, 결선투표제 변수로 인해 경선 판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어느 후보가 2위를 차지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득표력을 보일 것인지도 변수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문 전 대표가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호남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지는 장담할 수 없다"며 "경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의 비문 정서가 강해지거나 타 후보가 치고 나온다면 과거 노풍(노무현 바람)과 같은 이변도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묻지마 조직 투표 우려=완전국민경선제는 참여를 원하는 일반 국민은 누구나 선거인단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 투표도 우려된다. 향후 20일 동안 모으는 선거인단이 경선 결과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각 후보 캠프에서는 온-오프 라인을 총동원하는 등 선거인단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벌써부터 과열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후보 측에서는 외곽 조직을 동원, 선거인단 확보에 나서고 있다.

모 후보 측 관계자는 "광주에서 3만 명 이상의 지지자들을 선거인단에 포함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며 "공조직 등에서 나선다면 최소 5만~6만 명 이상을 선거인단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직 선거로 인한 표심 왜곡 등의 반발과 후유증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대통령 특검 대면조사 수용…일정·장소 조율중

이달 셋째주 초 이뤄질 듯

朴 헌재 출석 방안도 검토

박근혜 대통령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를 수용하기로 하고 일정과 장소를 조율 중인 것으로 지난 31일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대면조사와 관련,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날짜는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 2월 둘째 주나 셋째 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애초 특검은 '늦어도 2월초'까지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며 2월 둘째 주 초반에 조사할 것을 제안했으나, 박 대통령 측은 둘째 주 후반이나 셋째 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특검이 금주 후반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2월 둘째 주 후반이나 늦어도 셋째 주 초반으로 조사 일정에 합의할 가능성에 큰 것으로 보인다.

조사 장소는 특검팀 사무실이나 청와대 경내가 아닌 '제3의 장소'로 한다는 데 양측 모두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인 장소를 놓고 줄다리기가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면조사 일정과 장소가 최종 확정되면 박 대통령은 당분간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 법적 절차에 따른 공식 대응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대면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기자간담회와 보수성향 매체와의 인터뷰 등 비공식적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2월말 문을 닫는 특검이 막바지 수사에 열을 올리고, 헌재가 '3월13일'을 탄핵 결정 데드라인으로 못 박으면서 공개적인 법리 대결에 직접 뛰어들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박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리 대결과 별도로 기자회견이나 간담회 등을 통한 추가 여론전도 2월 중에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무거운 짐 남겨놓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권한대행을 맡은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배웅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탄핵심판 조속 결론" 당부

이정미 재판관 임시 소장 권한대행…'8인 체제' 심리

재판관 8명으로 줄어도 6명 이상 찬성해야 탄핵 인용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 31일 퇴임한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조속한 결론을 당부했다.

박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춰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헌재의 '8인 체제'가 시작됐다. 헌재 재판관이 9명에서 8명으로 줄어들면서 탄핵심판의 인용 및 기각을 결정할 셈법도 달라지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소장이 이날 퇴임하면서 헌재는 재판관 8명이 탄핵심판 심리를 이어간다. 후임자의 인선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재판관 1명 공석 사태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헌재는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임시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일주일 내에 재판관 8명 중에서 공식 권한대행을 선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유력시되는 '2말 3초'(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 예상대로 선고가 이뤄진다면 사실상 8인 체제에서 결론이 난다.

주목할 점은 8인 체제 하에서 탄핵 인용이나 기각을 위한 계산이 9인 체제와는 달라졌다는 것이다. 탄핵심판이 인용되려면 재판관이 9명일 경우 3분의 2인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3명까지 반대해도 인용되며 4명이 반대해야 기각된다.

재판관이 줄었다고 해서 인용의 '마지노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재판관 8명이어도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9명일 때와 마찬가지로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9명일 때 6명은 확률적으로는 66.7%이지만, 8명에서 6명은 75%로 높아진다. 산술적으로는 인용이 그만큼 어려워진 셈이다.

반대로 기각을 위해서는 9명일 때에는 적어도 4명이 반대표를 던져야 했다. 바뀐 8명에서는 3명이 반대해도 탄핵심판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명이 반대표를 내면 인용은 5명에 그쳐 기각된다.

박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 필요한 재판관 수에는 변함이 없지만, 기각을 위한 최소 재판관 수는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상황이 된 것이다. 여기에 3월 13일 이전까지 선고가 나지 않는다면 재판관 수는 8명에서 7명으로 다시 줄어들게 된다. 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55·연수원 16기) 재판관이 퇴임하기 때문이다.

7인 체제에서도 마찬가지로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 상황에선 3명이 아닌 2명만 반대해도 탄핵심판은 기각된다. 헌재의 탄핵심판 시계가 흘러갈수록 재판관 한 명, 한 명의 결정은 이전보다 더욱 더 중요하게 됐다. /연합뉴스